

전남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 비전 국내외에 알린다

전남 에너지주권 지키자

18~19일 여수서 해상풍력박람회
국회의원·발전사·시군 등 대거 참석
관련산업 육성전략·연관기업 협약
“재생에너지 확대·기본소득 시대”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중심
지로서 해상풍력산업 육성 비전을 국내외
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8~19일
여수 엑스포홀에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개회한다.

이번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는 ‘세계 해
상풍력 허브로의 담대한 도전’을 주제로
지자체 최초로 전남도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제시, 연관 기업과의 협
약 등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행사에는 대한민국 해상풍력을 이끌어
온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
원, 발전사, 기자재 사, 전남 시군 등
1000여 명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 1일차는 △기자재 공급망 구축
·에너지 기본소득·해상풍력 산업 교육센

터 설립·운영 업무 협약 △전남도 동부권
해상풍력 13GW 보급 확대 비전 및 지역
공급망 우대방안 △발전사 프로젝트 현황
과 공급망 참여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어 2일차는 △여수, 고흥 중심으로
공공주도 단지개발 계획 발표 △양일간
전남 소재 기자재업체 홍보 및 납품 계약
매칭 상담을 추진한다.

전남지역 미래먹거리가 될 해상풍력 산
업은 지난 2~3년간 글로벌 경기침체, 원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이어 3.2
GW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
정 쾌거를 이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후 화석연료 회귀 움직임이 보였으나 국
제사회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로
삼고 있다”며 “지난 4월 신안 집적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산업 메카로 도약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
중심에 여수, 고흥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가 발전사와 기자
재사가 네트워크할 최적의 기회가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 육성
과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견인을 하기 위

해 지속해서 힘을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폭우 대비 아파트지하주차장 차수판 점검

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과 용봉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지난 13일 북구 신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장마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

김양배 기자

“광주형 통합돌봄...”

☞1면서 계속 앞서 2023년에는 세계
지방정부연합 주관의 국제도시혁신상을
받으면서 광주 돌봄정책의 창의성과 국내
외 확산 가능성도 입증했다.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
난 2024년 한 해 동안 20개 지자체 및 기
관이 광주 통합돌봄을 벤치마킹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복지부와 국회
도 광주 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에 나섰
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의료서비스를 결합
한 ‘3세대 통합돌봄 시스템’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
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일상과 의료를
연결하는 선도 모델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 통합지원법’과도 방
향이 맞아 있어 전국 표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통합돌봄 정책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손자녀가족돌봄, 산
후조리비 지원 등 가족 돌봄 예산과 함
께, 영유아 보육료 증액, 시간제 보육서
비스 확대 등 보육체계 보강 항목도 담겼
다. 통합건강센터 설치, 권역외상센터 운
영, 치매안심센터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를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해당 추경안은
23일 열리는 제3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에서 심의·의결에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회 ‘광주의 날’ 행사
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과 ‘돌
봄+의료+생활 통합모델’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민
주당의 핵심 정책이 광주에서 꽃피워 지
방자치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히며, 광주 모델의 전국 확산을 예고했
다.

김 지사, 이번주 초 경제부지사에 강위원 임명

기재부 출신 관행 깨고 정치인 중용 전문성 부족·정무적 코드 인사 논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공적인 경제부
지사에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
고문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강 상임고
문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치고 김 지사의
결재를 거쳐 이번 주초 별정직 1급 공무원
으로 경제부지사에 임명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민선 8기 임기가 1년 남짓밖
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
는 개방형 대신,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있
는 별정직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판단 아
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기재부 출신 전문가들이
말아온 관행을 깨고 정치인 출신을 중용



한 데다 강 고문이 이재
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
로 분류되고 있어 김 지
사의 내년 지방선거 3
선 도전과 맞물린 정무
적 코드 인사가 아니냐

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강 고문이 현장과 정무를 두
루 이해한 실무형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으나, 경제부지사는 예산, 산업정
책, 투자 유치 등 고도의 행정·정책 역량
이 요구되는 자리로, 그간 기재정 고위 관
료들이 전담해온 핵심 직위인 만큼 논란
도 예상된다. 강 고문의 경우 중앙부처 실
무 경험이 전무한데다 예산 확보와 같은
성과도 검증된 바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면
서다. 기재부와 연관이 없는 정치인 출신

이 국고 확보 등 지역 현안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강 고문의 성비위 의혹, 음주운전 전력
등 과거 논란도 재점화되며 적절성 논쟁
도 불붙고 있어 이번 인사를 둘러싼 잡음
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강 고문은 영광 출신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장과 한총련 5기 의장을 지냈으
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출소 후에는 고향에서 복지공동체
‘여민동락’을 10년 넘게 운영했고, 광주
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노인복지관장을
맡았다. 2019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
기지사 시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을
지내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도했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
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오지현 기자

소기업소상공인공개
노란우산

더 오래,
더 든든하게

사장님 곁에
언제나

홍보대사
박미선

홍보대사
탁재훈

든든한 안전자산
노란우산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목돈 마련

부금 내
대출 지원

공제금
압류 금지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167호(2024. 12. 24. ~ 2026. 1. 31.)